

3. 공기업 민영화 적극 추진 방침

- (현황) 구조조정 비용 조달과 외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새정부는 해외 매각을 비롯한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과제) 공기업 민영화는 단순한 자원 조달 차원이 아닌, 해당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시장경쟁원리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 또한 민영화를 일거에 추진할 경우 매각 대상 공기업의 가치 하락이나 매각 시기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영화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인 매각 일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배경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IMF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IMF는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 특히 앞서 IMF 자금을 지원받았던 영국, 멕시코 등이 외화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이 공기업 민영화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음
- 새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고 외화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비용¹⁾과 부족한 외환보유고 문제를 공기업 민영화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함

□ 새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방침을, 4월에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전면적인 공기업 민영화 실시 계획을 발표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을 3자 또는 해외에 매각하고, 민영화 이전이라도 전력, 가스 등 공기업 독점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함

1) 금융 부문에만 KDI는 약 67조 원, 금융연구원은 약 75조 원의 구조조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KDI는 약 10조 원, 금융연구원은 약 30조 원을 조달할 것을 주장함

-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155개에 달하는 공기업을 가능한 한 모두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 하반기부터 매각에 착수할 계획임
- 즉 모든 공기업을 공공성, 기업성, 민영화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민영화를 추진함(그림 참조)
- 매각 방식은 주식, 자산, 사업부문 매각 등 모든 방법이 동원되며, 지분의 전량 또는 부분 매각의 여부에 따라 경영권 이동도 가능함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

유 형	기 업	민영화 방법
· 기업성 強, 민영화 가능성 強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	⇒ · 조기 민영화 실시
· 기업성 強, 민영화 가능성 弱	한국중공업, 석탄공사 등	⇒ · 경영 혁신을 추진해 구조 조정을 거친 뒤 민영화 실시
· 공공성 強, 기업성 中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등	⇒ · 조직 축소, 기능 통폐합 등 내부 구조조정 실시
· 공공성 強, 기업성 弱	농어촌진흥공사, 조폐공사, KOTRA 등	⇒

- 또한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동안 제한되어 왔던 공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혹은 부분 개방기로 함
- 여기에는 토지 개발·공급, 수도, 담배, 발전, 통신 등의 분야가 포함됨(표 참조)

<공기업 관련 업종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내용>

사 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토지개발 공급	미개방	전면 개방	
수도	미개방	전면 개방	수자원공사 민영화시
담배	미개방	25% 이하 허용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시
발전	50% 미만 허용	정부투자기관은 50% 미만 허용, 기타는 전면 개방	
유무선 전신전화	33% 이하 허용	49% 이하 허용	한국통신은 현행 20% 이하 유지

□ 평가 및 문제점

-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민영화不可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하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함
-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근본적 개혁 및 시장경제 원리 확립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공기업 민영화는 단순히 외국 자본 유치와 구조조정 재원 마련 차원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경쟁체제 도입과 시장경제원리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우 체제 전환 이후 무계획적인 민영화로 인해 국내 기간산업이 선진국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자체적인 발전 가능성을 상실하였음
-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일거에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에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공기업 민영화를 일거에 추진할 경우 기업 매매시장에 대한 공급 초과 현상을 초래하여, 매각 대상 공기업의 가치 하락 내지는 매각 시기의 장기화 등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국내 중시나 외국인투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공기업의 대량 매각이 구조조정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정 제시가 우선되어야 함
 - 가능한 한 모든 공기업의 매각이라는 원칙 아래에, 민영화 대상 기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매각을 시작하되, 민영화의 완결 시점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02년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곽 용 선 yskwak@hri.co.kr ☎724-4058)